

데스크 시각



정후식
정치부장·편집부국장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자를 지향한다” 196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쿠데타에 성공한 직후 창설한 중앙정보부의 부훈(部訓)이다. 초대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홍필 전 총리가 지었다는 이 슬로건은 1980년 신군부에 의해 확대·개편된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에도 계속 사용됐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작고 강력한 정보기관을 지향하면서 국가정보원이 된 뒤 원훈(院訓)은 ‘정보는 국력이다’로 변경됐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으로 다시 바뀌었다.

양지로 뛰쳐나온 국정원장들

대통령 직속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잇따른 조직 명칭과 부훈 변경에는 영욕의 역사가

국정원의 명예, 국가의 명예

투영돼 있다. 국정원은 지난 52년간 남북분단의 현실에서 ‘총성 없는 정보전쟁’으로 국가안보의 파수꾼 역할을 해왔다. 국제정보는 물론 대북·방첩·테러·사이버·산업기밀 등 국내 보안정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정보수집으로 국민의 정장을 지켜왔다. 반면, 불법 사찰과 도청 등을 통한 국내 정치개입과 간첩조작, 인권침해 등으로 ‘정권안보기관’이라는 오명도 써야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적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73년 일본 도쿄에서 중정 요원들에 납치돼 수장 직전 미국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전두환 정권 때인 1987년 장세동 당시 안기부장은 야당인 통일민주당 창당대회에 조지 폭력배를 투입(용팔이사건)하고, 수지깎 사건을 북한의 공작으로 조작했다. ‘문민정부’를 표방했던 김영삼 정부 시절에도 안기부 비밀도청조직인 ‘미림팀’이 1994년부터 3년간 정·재계 인사들을 무차별 도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권영해 안기부장은 대선을 앞두고 ‘총풍’과 ‘복풍’ 등 공안사건 조작에 연루돼 정권교체 후 검찰에 구속됐고, 1999년 징역 5년형을 받았다. 최근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선·정치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그

뒤를 이었다. 검찰 수사 결과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인터넷 댓글을 올리도록 불법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이 대선 개입 의혹으로 집중포화를 맞는 사이 이번에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전문을 전격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NLL(북방한계선) 발인’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 와중에 2급 비밀인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일방적으로 까발린 것이다. 당장 ‘불법으로 불법을 덮으려는 것’, ‘물타기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기밀 누설자가 된 정보기관

남 원장은 한 발 더 나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회의록을 공개했다”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 ‘국익과 국가의 명예 보다 국정원의 명예가 우선’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발언으로, 국정원이 전략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보수 성향의 미국 경제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WJSJ)조차 ‘한국에선 정보기관이 누설자(Leaker)’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보

기관인 국정원이 기밀문서로 분류된 대화록을 공개해 정치적 대립의 방아쇠를 당겼다”고 평가했다. 음지에서 ‘무명의 헌신’을 해야 할 국정원 장들이 양지로 나와 정치 공방의 주인공이 되면서 국정원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 대학 교수·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의 시국선언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1일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기웃거리고 정치권에 뛰어들 때는 이미 지났다”면서 이번 기회에 국정원의 국내 정치 파트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사상 첫 국정조사가 2일부터 시작했다. 다음달 15일 까지 실시될 이번 조사는 정쟁의 무대가 아닌 실제적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 국정원의 고질적인 정치개입 악습을 끊어내고,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전기가 돼야 한다. 그리하여 정권의 안위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행복’을 위한 정보 수집에만 전념하는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who@kwangju.co.kr

은펜클럽



최희동
전남대학교총동창회 상임부회장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비판하는 촛불집회와 성명발표가 확산되고 있다. 대선 정국에서 NLL을 이용한 새누리당의 전략은 모든 것을 떠나 대통령 당선이라는 목적만을 놓고 본다면 일단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뜬금 없이 국정원의 명예를 지킨다면서 들고 나온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로 인하여 역풍을 자초했다.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이 그토록 주장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고, ‘보고 드렸다’며 굴욕의교과 성토했던 대목은 북한 6자회담 대표가 두 정상에게 보고 드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

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선 결과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의혹에서 시작된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경찰의 사건 축소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대선 토론회에서 주장했던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는 사실을 모른 주장이 되었고, ‘대선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나온 수사발표’는 결국 선거개입이 패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행동은 아직도 아리송하다. 특히 김윤관 서울경찰청장의 지시에 의한 사건 축소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일인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새누리당은 정보기관의 선거개입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무위반이라는 자유당 정권이나 군사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을 자행하고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본질을 더욱 위한 맞불 놓기에 급급한 모습이어서 더욱 안쓰럽다. 죽은 노무현 대통령까지 끌어들이 NLL을 대선에 이용하려는 작태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집권당의 행태로 타당한가는 논의로 치고 한두 사람도 아니고 선대위의 중핵

을 맡은 분들이 거의 동일되다시피 한 정황을 보면 우리 정치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으니 나라의 미래가 암담하기만 하다. 자신이 한 말이 사실이 아니면 정계를 떠나겠다고 발언한 사람은 여럿 있었지만 그 약속을 지켰다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듣지도 못했으니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신뢰는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믿음을 뜻하는 신(信)은 사람(人)과 말(言)이 합쳐진 글자다. 사람이 자신이 한 말을 꼭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박대통령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중국에는 믿음에 대한 고사가 많다. 그중 논어의 ‘안연’ 편에 나오는 공자와 자공의 이야기를 보자. 자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는 ‘먹을 것을 충분하게 하고(足食), 병사를 충분히 양성하고(足兵), 백성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足信)’라고 답한다. 자공을 그 말을 듣고 “그중 하나를 버린다면 어떤 것을 버려야 합니까?”하고 묻자 공자는 ‘군사를 버려야 한다.’고 답한다. 자공이 다시 “또 다른 것을 버려야 한다면?”하고 묻자 주저하지 않고 “먹는 것을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신뢰가 없

이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렇다. 국가지도자의 국민에 대한 신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방문에서 신뢰에 대해 강조했다. 그렇다면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자들에게는 법에 따른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 측근과의 신뢰보다는 국민과의 신뢰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레지스탕스로, 외교관으로 활동하다 인권과 환경문제에 관한 사회운동에 참여했던 스테판 에셀은 개인들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나 생존권 등 중요한 문제가 권력자의 구미에 맞게 바뀌어버리는 환경을 경계했다. 그래서 그는 ‘분노하라’라는 외침으로 생각 없이 사는 이들을 질타했다. 우리가 늘 깨어있어야 할 이유다. 은펜클럽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심는 코너입니다.

기고

문화전당은 창조경제 1호-발상의 전환 필요하다



김성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이 될 문화전당의 개관을 겨우 1년 반 남짓 높고도 콘텐츠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운영주체를 놓고 논란이 벌어져 걱정만 쌓여간다. 문광부는 특수법인을 만들어 문화전당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입법예고하여 7월 20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와 각 지방의회는 정부의 직접 운영을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는 2015년 개관은 물론이고, 향후 재정문제가 지 연결되기 때문에 시민들도 이 문화전당의 의미에 대해 적극 관심을 보여야 한다.

첫째, 문화전당은 광주 미래의 핵심 지역발전 사업이다. 광주는 2002년 대선 때 다른 지역이 해양중심도시, 과학중심도시, 금융중심도시, 행정중심도시를 미래의 지역 핵심사업으로 정할 때 문화예술중심도시를 표방했다. 광주가 이를 선택한 것은 2차산업을 추격하기 보다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 나후되었던 20세기 지역경제 관을 뒤집어 보자는 혁신적 발상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러 절차로 2006년에야 특별법이 제정돼 녹장 출발하게 됐다. 여기서 핵심인 문화전당은 아시아지역 모든 문화예술자원을 집적(아카이브)하고, 이를 기반으로 아시아인들이 새로운 문화를 융합·창조하는 ‘창조발전소’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공간은 광주만의 것이 아니라 국내외 예술인과 아시아인의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해양·과학·금융·행정중심사업들을 특수법인이 아닌 국가가 주도했듯이 문화예술사업도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가 주도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문화전당은 대한민국의 창조경제사업 1호이다. 21세기 들어 문화예술이 미래 발전의 화두가 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성

공모델을 찾기는 어렵다. 그만큼 새로 개척해 나가야 할 분야이다. 그런데 최근에 그 방향이 명확해졌다.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6월 29일 중국 청화대에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국은 성장과정에서 선진국들을 따라가면서 추격형 경제발전을 이뤄왔는데 그런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한국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꿔 가겠다는 ‘창조경제’ 의지를 보였다. 또 “창조경제에 있어 중요한 것은 사람이며, 창의력과 잠재력이 나오려면 열심히 일하고 맘 흘러 일할 때 정당한 보상을 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통령의 이 같은 언행은 앞으로 IT·BT·CT는 물론 문화예술을 가지고 선도형 경제의 모델을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문화전당은 창조경제의 가장 적당한 첫 번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의 융성을 새로운 ‘먹거리’인 문화산업으로 선순환시키는 일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러한 유례가 없기 때문이다. 문화전당 개념 또한 세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프로젝트이다. 정신적 자원을 가지고 세계인과 함께 창조경제의 성공모델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시대에 경부고속도로가 고도성장의 기반이 되었고, 부산컨테이너항은 대한민국을 세계 10위 무역국으로 올려놓는 역할을 했다. 이제는 알마가 들려갈지 모르는 문화예술도 기간산업으로 설정하고 정부가 확실하게 기반투자를 해야 한다. 광주시민들은 지난 수 십년간 감언이설만 내뿜고 뒷감당 못하는 정책을 수없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불신 속에서 정부 기구 운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문광부는 “운영주체가 특수법인이 되어도 문화전당은 여전히 국책사업”이라고 공언하고 있지만 법인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문광부나 기획예산처에 대해 ‘을’이 돼 인원이야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 진다. 예산과 공무원의 증원을 막으려고 법인화를 시도하는 거라면 거시적 구도의 미래 창조경제를 잃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발상을 바꿔 창조경제 성공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社說

한·중 FTA 협상 농업피해대책 서둘러야

한국과 중국간의 정상회담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년 반을 끌어온 협상이 출발 선상에 있으나 양국의 FTA가 가져올 파장이 워낙 큰 점을 감안하면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다. 특히 농·수·축산부문에 입게 될 타격은 치명적이며 농·수·축산부문의 피해는 전담으로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일 “한·중 FTA의 1단계 기본지침협상이 이르면 8~9월쯤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을 보면 2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6차 회의에서 기본 지침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한 뒤 8~9월경 중국에서 진행되는 7차 회의에서 조문화한다는 것이다. 두 나라는 그동안 1단계 협상에서 상품자유화율, 민감·초민감·일반 품목의 비중 및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되면 2단계로 본격적인 양허 협상에 들어가 품목별 관세

철폐 등을 놓고 논의하게 된다. 가격이나 한·미 FTA로 빈사 지경인 전남의 농·수·축산 농가들은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희생 불능의 상황에 이를 수 있다. 농업관련 단체들은 그 피해액이 15년간 29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농민과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한·중 FTA는 지리적 인접성과 농·수·축산물 생산 구조의 유사성 등으로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수밖에 없다. 비록 자동차·철강 등 업종의 관로 확대에 따라 비교이익이 크다고 하더라도 생명의 근간인 농업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정부는 먼저 농·수·축산 품목을 협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미 협상을 거울삼아 서두르지 말고 농민과 농업전문가들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해야 한다. 전남도도 이에 대응할 농·수·축산 관련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길 바란다.

‘적자’ 고속버스 감축만이 능사 아니다

금호고속이 최근 서울과 해남을 오가는 고속버스 운행 횟수를 하루 7회에서 6회로 감축했다고 한다. 승객에게 받는 요금만으로는 도저히 운행 원가를 감당하지 못해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 운행 횟수를 줄였다는 것이다. 인구는 매년 줄고 있는 반면 자가용 운전자는 갈수록 증가해 승객 수 감소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호고속의 경우 서울~해남, 진도~서울, 목포~인천, 영광~서울 등지를 운행하는 고속버스 가운데 적자를 보는 비수의 노선만 26개에 이른다 한다. 지난해 10월에는 하루 한 차례 목포~안양을 오가는 노선이 운영안 등을 이유로 폐지됐다. 직행버스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전체 89개 직행버스 노선 중 비수의 노선이 34개에 달한다. 광주~옥포~노치간 직행버스는 5개월동안 무려 2900여만 원의 적자를 봤고, 곡성~옥포~서울을 오가는 직행버스도 하루 1회 운행에만

40만 원의 운송 적자를 내고 있다. 버스 운행 감축은 회사 입장에서 수익을 따져야 하기에 불가피한 조치로 여겨진다. 하지만 고속버스나 직행버스도 ‘주민의 발’이라는 점에서 시내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으로 봐야 한다. 적자만을 이유로 무리하게 감축한다면 지방에서 서울로, 시골에서 도시로 오가는 주민들의 불편과 시간·금전적 낭비는 불을 보듯 훤히 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버스회사 등은 수익노선을 늘려 비수의 노선에 적자를 보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현재 KTX에서 낸 수익을 무궁화 및 새마을호에 보전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이게 여의치 않다면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승객이 없는 상황에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적정선이 유지된다면 설사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운행해야 한다. 물론 이는 대책 마련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無 等 鼓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지 3년째가 다 되어가는 1792년 4월 26일, 프랑스 공병대 중대장이자 아마추어 음악가였던 루제 드 릴(Rouget de Lisle)은 스트라스부르의 숙소에서 노래 한 곡을 만들었다. 시민이 주도하는 대혁명에 위기감을 느낀 주변 왕정국가 중 오스트리아가 프랑스 동부를 침략하자, 프랑스가 이에 맞서 선전포고를 한 직후였다. 총칼을 들고 라인강 변으로 출정하는 전사들의 피끓는 심경을 담은 이 곡은 노래라기보다 절규에 가까워, 처음 불렀을 때만 해도 반응은 ‘별로’였다. 루제 자신도 하룻밤 만에 지어낸 이 노래가 곧 잊혀질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2개월 후 마르세유에서 열린 ‘지원병 송별회’에서 우연히 연주되면서 단숨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됐고, 다음날 아침엔 전 세계가 이 노래를 부르게 됐다. 원래 제목은 ‘라인군의 군가’였지만, 마르세유 출신 의용군들이 즐겨 불렀기에 ‘라 마르세예즈(La

Marseillaise)로 통하게 됐다. 오늘날 프랑스 국가(國歌)인 ‘라 마르세예즈’의 탄생 뒷이야기다.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지만, 이 노래는 굴곡진 역정을 겪게 된다. 1795년 국민의회에서 국가로 제정됐지만 1815년 왕정이 복고되면서 금지곡이 됐다. 1830년 7월혁명으로 다시 공인을 받지만 나폴레옹 3세에 의해 또다시 금지곡으로 지정되는 비운을 겪는다. 절대권력에 짓밟히는 신세를 면치 못했던 ‘라 마르세예즈’는 시민권력이 확립된 1879년 이후야 국가로서 제자리를 찾았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공식 기념곡으로 신속히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정부가 밝혔으나, 너무도 뒤늦은 조치지만, 이제야 온전한 평가를 받는 듯한 느낌이다. 이 노래는 절대권력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자 광주의 피를 머금은 역사적 자산이기도 하다. ‘라 마르세예즈’처럼 국가까지지는 아니더라도, 5·18기념곡이 되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홍행기 사회1팀장 redplane@kwangju.co.kr



일제시대는 잘못된 표현...일제강점기라 표기해야

TV에 출연한 게스트들이나 방송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번이 일제시대라는 말을 쓴다. 물론 제대로 배워서 잘 알고 있는 기자나 연가 같은 사람들은 그래도 올바르게 표현하는 것이다. 일제시대라는 말은 너무나 잘못된 표현이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라고 해야

맞다. 언뜻 보면 두 말은 아무 문제 없는 말처럼 보인다. 하지만 ‘일제시대’라는 말은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교육적으로도 잘못된 표현이다. ‘일제시대’라는 용어는 일본에 의해 강제로 점령당한 시대를 우리끼리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말이다.

지금까지 국민적 노력과 출판사나 언론사의 노력에 힘입어 그나마 일제시대라는 말을 빼고 ‘일제강점기’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나름대로 많이 정착돼가는 단계인데 아직도 일부 TV출연자들이 이런 걸 모르고 일제시대라는 말을 쓴다. 라디오 출연자들도 불쑥 불쑥 그렇게 말하는 걸 듣는다. 유승 근대에서 개발한 한글 프로그램에도 ‘일제시대’라고 입력하면 자동으로 ‘일제강점기’라고 변경돼 나올 만큼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큰데, TV에 출연하는 사람들도 이런 표현에 대해 사전에 공부해 줌 하고 나왔으면 좋겠다. 이것을 일제강점기라고 써야 한다는 걸 모르는 청소년들은 이 TV자막을 보고 여전히 ‘일제시대’가 맞는 걸로 알 것이다. 정말 TV 출연자들이 자질을 갖춰야 하며 자막도 실수 없이 내보내도록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다. ▲유병숙·광주시 광산구 박호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업간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대표 FAX 222-4267)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